

“난민? 그냥 싫어” 70만 청원… 동정심 결여 ‘한국의 민낯’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16 제노포비아

치안 악화·경제 손실 주장하며 혐오 범죄 피해 두려움, 합리적 근거 없어 생계비 436명 지원… 월평균 43만원

#. 지난달 16일 서울 도심에서 ‘난민법, 무사증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 난민 수용 반대 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가짜 난민을 즉각 추방하라”,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을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지난 7월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71만명이 넘는 사람이 지지를 표했다. 이로써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은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됐다.

대한민국이 난민 혐오로 들끓고 있다. 난민 반대 측은 치안 악화,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내전을 피해 한국에 온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혐오를 버리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정심이 결여된 한국인에게 묻는다.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들이 한국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 기대하는가” 뉴욕 타임스는 지난 7월 사설을 통해 제주 예멘 난민으로 촉발한 한국인의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를 꼬집으며 이같이 일갈했다.

◆ ‘범죄 우려돼’… 내국인 절반 수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들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 상황에 놓인 이집트인들이 난민 혐오에 반대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연행뉴스

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반대 측의 주장대로 난민 즉,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을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인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절반 수준이었다.

내국인의 범죄율이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지만, 난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굵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 7월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4.4%포인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은 53.4%로 ‘찬성한다’ (37.4%)보다 16%포인트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예멘 난민 관련 설문 조사를 보면, 난민 수용 거부감에 대한 원인으로는 ‘난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44.7%로 가장 많았다. ‘종교 및 문

화적 갈등’ (21.9%), ‘난민에 의한 자국민 일자리 감소’ (15.6%), ‘난민 수용에 따른 세금 지출 문제’ (10.7%)가 뒤를 이었다.

난민 찬성 측은 “난민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럽 주요국 중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독일은 최근 30년 가운데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반이슬람 정서를 부추기는 페이크 뉴스에 휘둘러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난민에 대해 제대로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는 난민심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상세히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가 낸 세금이 난민 주머니로?’

난민 반대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적하며 “가짜난민을 만드는 난민법을 폐



지난달 16일 서울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가짜 난민을 추방하라”고 외치고 있다. /뉴스스

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난민법 제4조에 따라 임시비자를 발급받은 난민 신청자는 정부로부터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그럼 얼마나 많은 난민이 생계비 지원 혜택을 받았을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9942건이다.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21명밖에 되지 않았다.

난민인권센터가 발표한 ‘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생계비 지급대상자 1만3294명 중 3.2%인 436명만이 월평균 약 4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생계비를 지급받은 기간은 평균 3개월이었다.

난민인권센터는 “많은 난민 신청자가 생계비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난민 1만2858명은 한국입국 이후 6개월 동안 그 어떠한 권리도 보

장받지 못한 채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난민 반대여론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유엔난민협약 국으로 종교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는 중학생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란 국적의 친구를 위해 같은 반 아이들이 힘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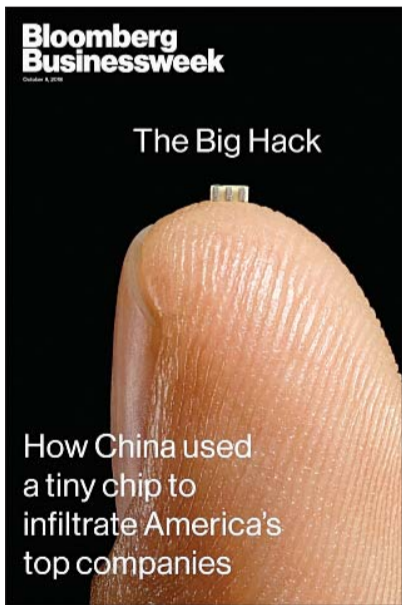
시위에 참여한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친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란 국적의 친구의 난민 인정을 도와달라고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중국發 슈퍼마이크로 스파이칩 논란

글로벌 IT업계 보안 ‘경고’… 中 제품 사용 불안감↑

중시, 중국 기업 주가 폭락 등 혼조 지식재산권·기밀 수집 등에 사용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보도된 중국 스파이칩.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홈페이지

지난 주에 터진 중국발 스파이칩 스캔들이 글로벌 IT업계를 동요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IT제품에 대한 보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스캔들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IT업계에서 중국제품을 안심하고 쓸 수 있을지 의심하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의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좁쌀 크기의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칩은 미국 회사로부터 지식재산권과 거래 기밀을 수집하는 데 사용됐는데 슈퍼 마이크로라는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사에 의해 해당 서버에 부착됐다는 내용이다. 슈퍼 마이크로는 데이터센터 서버를 중국에서 조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인 5일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PC 제조사 레노보 주가는 15% 폭락했으며 ZTE도 10.99% 급락했다. 레노보는 5일 성명을 통해 “슈퍼 마이크로는 레노보의 부품공급 업

권 도둑질을 끝낼 때까지 조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과 아마존은 보도가 나온 직후 자체 조사결과 해킹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성명을 냈다. 또한 8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영국 사이버보안센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의혹에 언급된 회사들의 성명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8일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해 “화웨이는 철저한 사이버 보안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 받은 사안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웨이는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보안 검증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적극 해명해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번 보도가 약 17명의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하며 해당 기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스캔들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유독 중국IT제품에 보안성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것도 단순한 실수나 기술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보유출

을 의심할 정황이 생긴다는 점을 비판했다.

2013년 러시아 국영방송은 중국에서 수출한 일부 다리미에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통신 부품이 들어있고 바이러스와 스파이를 유포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런 의혹은 중국산 서버, 노트북을 비롯해 전기 주전자나 CCTV까지도 확산됐다.

또한 올해 초 중국이 아프리카연합(AU)을 5년 가까이 삼습 해킹한 사실도 보도됐다. 중국이 2억 달러 자금을 투입해 지은 본사에서 조직의 비밀 자료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복사된 사실이 적발됐다. 원격 해킹을 위한 백도어와 건물 내부 도청기도 설치됐으며 현지 통신인프라 제공은 화웨이와 ZTE가 담당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몇 가지 사건을 보건대 중국산 IT제품에 보안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나서서 보안점검을 받겠다는 회사를 의심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중국 제품을 안심하고 쓰기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관련 업체의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세종시

가로수·보도블록·공원 등 시설물 관리 미흡 드러나

보도블록, 놀이터 등 세종시의 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9일 세종시의 가로수, 보도블록, 교차로, 자전거도로, 공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모범도시,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성장동력 다변화 ▲인프라 양적·질적 향상 ▲도시 고령화 등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이은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의원에 따르면 54억 원이 투입된 세종시 자전거 도로는 지난 2012년 6월에 준공돼 사용기간이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설물은 녹슬고 쓰레기와 잡초로 뒤덮여 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 공원의 나무들은 대부분 고사했으며, 살아있는 나무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도보통행로의 보도블록 역시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놀이터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원은 “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고 하지만 세종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부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